

막 오르는 3강 체제... 중금리 대출·신용평가모델 격돌

kakaobank K bank toss

금융 이슈리포트

인터넷전문은행 경쟁

금리인하 등 고객확보 경쟁 본격화
카카오 중금리대출 한도 1억 설정
케이 중금리대출 비중 32%로 확대
토스 15등급 세분화된 CSS 구축

점포는 없고 인터넷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토스뱅크까지 진입한다.

이들 은행은 금융데이터와 함께 통신요금 납부정보,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해 신용평가모델을 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은행의 설립목적이 '중금리 대출 확대'인 만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토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고 올해 2월 본인가를 신청해 4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 실제 거래 테스트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연계 등의 후속작업 등을

<인터넷은행 개인 신용평가 모델>

/금융위원회, 각 사

구분	활용정보	예시
카카오뱅크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결제내역, 공공정보 등
케이뱅크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	BC카드 결제내역, KT통신정보 등
토스뱅크	앱 이용 고객 카드 및 계좌정보	휴대폰번호 변경이력, 최초 신용카드 개설일 등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은행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히 토스뱅크는 영업초기부터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목표는 올해 말 34.9%에서 내년 말 42%, 2023년 말 44%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10% 안팎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빅3 경쟁 본격화... 중금리 대출 격전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늘리면서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더 낮은 금리로 은행을 옮겨다니는 금리 노마드(유목민)족이 중·저신용자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리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 신용대출의 12.1%로 시중은행(24.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중금리 대출의 대부분은 보증부 사잇돌 대출이 91.5%로 민간중금리 대

출(8.5%)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사잇돌 대출의 66%가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돼 있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비중을 내년 25%에서 2023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는 코리아크레딧부로(KCB) 신용점수 820점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도 낮췄다. 중금리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는 최대 1.52%포인트 낮아진 2.98%다.

케이뱅크도 중금리 대출 비중을 내년 25%에서 2023년 32%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실명계좌를 내주며 수신잔액을 늘리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달 말 수신잔액은 12조1400억원으로 3월보다 3조4200억원 증가했다. 늘어나는 수신잔액만큼 대출여력이 확대돼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

는 분석이다.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관건

다만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 이들 은행은 상환역량을 파악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에 매진할 전망이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연체·상환이력 등의 데이터가 부족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의 한계를 해소하겠다는 것. 신용평가모델에 금융거래실적,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 금융데이터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납부정보,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를 포함해 상환역량이 충분한 중·저신용자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한 플랫폼,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누적된 고객데이터를 분석해 CSS에 반영한다. 또 카카오페이 등으로 모인 결제정보와 공공정보(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을 활용해 대안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또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통신료 납

부정보 등을 결합해 중신용자·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을 구축하고 있다.

통신사를 기반으로 한 케이뱅크는 주주사와 관계사의 데이터를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에 반영한다. 최대주주인 비씨카드 결제정보와, 다날의 휴대폰 결제정보, 모회사 KT의 통신정보 등을 활용해 CSS를 구축한다. 케이뱅크는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 승인 최소기준을 과거 6등급에서 일부 9등급 고객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토스뱅크는 종합 금융앱 토스를 통해 누적된 고객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적금융정보 비중은 줄이고 대안정보 비중을 늘렸다. CB사가 평가한 1~10등급의 신용평가정보를 1차적인 검증장치로 활용하고, 이와 함께 토스앱에 저장한 카드 및 계좌내역, 부동산 정보등을 반영해 15등급의 세분화된 CSS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토스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상승·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인 만큼 신용평가 모델을 끊임없이 고도화 해 나갈 것"이라며 "출범과 동시에 차질없이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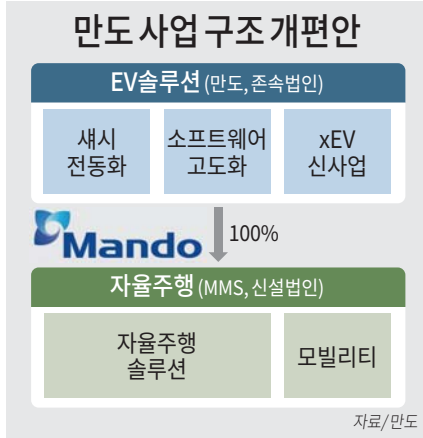
주주 지분가치 희석 vs 기업 재평가 계기

만도 물적분할 논란

분할발표 후 12.3% 이상 주가하락
일각선 기업 성장성 제고 의견도

자동차 부품 계열사 만도가 물적분할에 나선다. 지분가치 희석으로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사업분할을 통해 기업 성장성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일 만도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전기차(EV) 솔루션'과 '자율주행(ADAS)'을 양대축으로 삼아 오는 2025년까지 합산 매출 9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0일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9월 1일을 분할기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신설법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MMS·가칭)는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만도가 MMS의 지분 100%를 소유한다. 조성현 만도 총괄사장은 "만도와 MMS, 양사 모두 전문 기업으로서의 가



치를 인정받아 주주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만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00원(-1.38%) 하락한 6만4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물적분할 발표 이후 12.3% 이상 하락했다.

만도의 단기적인 주가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인 LG에너지솔루션을 같은 방식으로 물적분할 했을 때 주가는 하루 만에 6%가량 하락하는 등 주주들은

분사를 악재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만도가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선택해 기존 주주들은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을 단 한주도 갖지 못한다. 차후 기업공개(IPO)가 진행되면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것.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를 볼 때 기존 주주 관점에서 ADAS 사업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로는 부정적 이벤트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분할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설법인은 IPO, 전략적투자자(SI) 등 다양한 투자 유치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분할을 통해 레벨(Level) 4 이상의 자율주행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을 기대하며, 글로벌 산업 수요를 능가하는 존속법인의 성장성 등을 포함한 전사적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국민 볼모로 강요 vs 불법 대체배송 통제

<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

>> 1면 '생활물류 대동맥'서 계속

업계 관계자는 "전체 택배기사 대비 파업에 동참한 인원이 적어 전반적으로 택배 운반에 큰 영향은 없지만 인원 대체가 쉽지 않은 몇몇 지역에선 배송이 지연돼 일부 회사의 경우 대리점과 협의해 집화제한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앞서 성명서를 내고 택배노조에게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물류협회는 "택배노조는 구역이나 물량조정 방법에 대해선 대안 제시 없이 '소득 감소 없는 작업시간 감축'만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달성하려 한 궁극적 목적은 작업시간 단축이 아닌 수수료 인상을 통한 수익 확대임이 명확해졌고, 수수료를 인상해야만 자신의 구역 또는 물량을 줄이는 데 동의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이며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소득 감소 없이'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또 택배기사가 별도의 대가를 받고 분류작업을 하게되면, 그 대가에 상응해 소득 감소가 없는 범위내에서 배송 작업 시간도 줄게 된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그 이행 시기 등을 협의하던 중이었고, (진행되고 있는) 2차 합의가 타결되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당 실질 소득은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당시 택배 노사, 정부, 정치

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온 분류작업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는 등 1차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경우 4000명, 한진과 롯데는 각각 1000명을 분류작업에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노조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배송 인력을 제외한 불법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고, 징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위반, 계약요금 위반, 중량부피 초과 등으로 배송의무가 없는 물품 일체를 배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업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택배를 중심으로 한 생활물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파업에 빨아 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낸 성명서에서 "거듭되는 과로사 문제로 택배 분류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 문제가 중점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 기업과 소비자,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택배노조는 신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해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바로 수익창출 어려워... 승자의 저주 우려

1면 '5조는 무리... 이베이'서 계속

불과 3~4년 전만 해도 이베이코리아는 국내 전자상거래 1위였지만, 네이버와 쿠팡의 외형성장에 뒤쳐진 게 사실이다. 물류센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단점이다.

이베이코리아의 물류센터는 경기도 용인·동탄·인천 3곳 뿐이고 신선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쿨드체인(저온물류) 시설은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와 롯데, 두곳

모두 3조원 후반에서 4조원 초반을 제시했을 걸로 예상된다"며 "이보다 높은 금액이라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사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인수하더라도 바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승자의 저주'를 피하려면 인수 후 시너지에 대해 미리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